

“독립에 헌신한 선조들의 피와 땀 물거품 만든 것”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광복회 광주지부 반대 목소리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들 ‘분개’
시민단체 “日 위한 역사쿠테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형석 대한민국의사미래 이사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김 관장은 지난 2022년 8월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내고 과거 정부의 친일 청산 작업을 폄하하고 안익태·백선엽 등 친일파로 규정된 이들을 옹호한 바 있다.

13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복회 광주지부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민영진 선생의 후손 민수웅씨는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기리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항일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영완 선생의 후손 고병돈씨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는 특정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역사부정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집단이나 인물의 견해에 맞춰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독립기념관의 정신과 사명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광복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유한휘 선생의 후손 유경식씨도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물로 이념적 편향성과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인물”이라며 “대한의 독립을 위해 헌

신했던 선조들의 피와 땀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허무하다”며 탄식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고인석 선생의 아들 고육 광복회 광주시지부장은 “진보와 보수 정치적 가치관의 대립을 떠나 독립운동의 정신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김형석 관장의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 패망 당시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에 식민교육을 심어놔 옛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는 망언을 남겼다. 80여년이 지난 지금의 사태를 보면 그의 망언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우리 스스로 왜곡과 오류를 범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며 분개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107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친일파를 옹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것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도 모자라 일본을 위해 역사 쿠테타를 벌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욕보이더니 최근에는 독립운동가 단체의 반대에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 관장은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건국 일자를 왜곡해온 인물이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옹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관장은 취임 당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 중 억울하게 매도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망언하기도 했다”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와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할 수 없다. 어느 정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일과 항일 역사를 물고나무 세우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이 못마땅한가,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이 부끄러운가”라며 “우리는 윤 정권의 친일 역사 쿠테타 시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복절 기념식 파행’

■1면서 계속 이어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반일 종족주의’ 공저자) 등도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임명 사례로 꼽힌다.

지난 1월 취임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짚은 세대에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라이트 성향의 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2006)’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집단 반발의 촉매제가 됐던 독립기념관이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기념관에서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은 그동안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매년 자체 경축식을 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에도 광복절 경축식은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가 아예 개최되지 않는 건 1987년 개관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취소된 광복절 경축식은 충남 홍성 내포 신도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형석 관장은 “올해 기념행사는 충남도에서 하겠다고 해 취소했다. 나와 관련된 바 없다”며 “광복회·야당에서 ‘친

일’ 등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독립운동을 폄하·비방한 적 없다.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역사학자들은 ‘임명된 기관장들은 학자로서 양심을 버렸다’며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인선에 우려를 표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사편찬의 의미·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고, 독립운동을 부정했던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았다. 이들은 학자로서 양심을 잃은 것인가”라며 “뉴라이트들이 자신의 학문적 소신과 무관한 국가기관을 평정했다. 전문성이 없는 인물로 인해 민족 자주·독립 정신의 근간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조국당 국방위원들 “김용현 후보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13일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대통령실 졸속 이전, 채해병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심기만 쟁기는 인사가 오는 게 적당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속이

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다”며 “특히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한데 멸절된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로 바꾸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육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경호동으로 바꿨다”며 “‘회전문 인사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권, 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